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범죄통계표의 분석방법은 범죄상황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숨은 범죄를 포함한 객관적인 범죄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 ㄴ. 참여적 관찰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ㄷ. 추행조사방법은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조사하여 그들의 인격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그 상호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ㄹ. 사례조사방법은 범죄자 개개인에 대해 인격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호연결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 ㅁ. 표본조사방법은 특정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체 범죄자에게 유추적용하는 방법이다.
- ㅂ. 숨은 범죄의 조사방법으로 사용되는 피해자조사방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보다는 사회의 전체범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 ① ㄱ - ㄴ - ㄷ
② ㄴ - ㄷ - ㄹ
③ ㄷ - ㄹ - ㅁ
④ ㄹ - ㅁ - ㅂ
⑤ ㄱ - ㄹ - ㅂ

문 2. 베카리아(Beccaria)가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에서 주장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와 형벌은 상당한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일반예방 내지 범죄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이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 ③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처벌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이 더욱 효과적이다.
- ④ 사형은 폐지하고 구금형으로 대체해야 한다.
- ⑤ 배심원에 의한 평결을 배제하고 법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문 3. 간통죄를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는 어떤 유형의 비범죄화라고 할 수 있는가?

- ① 법률상의 비범죄화로서 국가의 임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그 행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우
- ② 법률상의 비범죄화로서 그 행위가 법적·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승인된 경우
- ③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 국가가 일탈행위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형벌권을 철회하고 그 문제해결을 사회에 일임한 경우

- ④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 형사사법의 공식적 통제권한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행위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경우
- ⑤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 그 행위의 가벌성이 여전히 인정되지만 국가가 갈등의 해결을 개인에게 위임한 경우

문 4. 형사정책의 국제화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범죄학회’(ISC)는 ‘국제형사학회’(IKV)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 ②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CIDP)는 2차 세계대전 이후 ‘UN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로 발전되었다.
- ③ ‘국제범죄인류학회’(IKK)는 롬브로조(Lombroso)와 페리(Ferri)가 중심이 되어 초기에 범죄인류학적 연구를 하였다.
- ④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국내입법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다.
- ⑤ 우리나라는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문 5.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사회 일반인의 반규범적 의식이 일반범죄의 경우에 비해 희박하다.
- ㄴ. 지능적·조직적으로 범하지만 비권력적·비관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 ㄷ. 사회적인 명망가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 ㄹ. 일반범죄에 비해 숨은 범죄의 비율이 높고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된다.
- ㅁ. 사회·경제·직업적으로 재량 내지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배임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 ㅂ.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높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 ① ㄱ - ㄴ - ㅁ
② ㄱ - ㄷ - ㄹ
③ ㄴ - ㄷ - ㅂ
④ ㄴ - ㄹ - ㅁ
⑤ ㄹ - ㅁ - ㅂ

문 6. 낙인이론과 비판범죄론의 비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론은 모두 형사사법기관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공식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② 낙인이론은 범죄의 원인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며, 비판범죄론은 범죄의 정치경제성을 강조한다.
- ③ 두 이론은 모두 사회적 가치·규범 및 법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④ 두 이론은 모두 범죄와 범죄통제의 문제를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⑤ 비판범죄론은 일정한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주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점에서 낙인이론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문 7.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주장은?

- 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범죄자가 되기 쉽다.
- ② 문제아로 찍히면 비행을 하기 쉽다.
- ③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으면 범죄자가 된다.
- ④ 좋은 자아관념을 가진 사람은 범죄적 환경 속에서도 범죄에 빠져들지 않는다.
- ⑤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약하면 범죄자가 되기 쉽다.

문 8. 사회방위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실증적 범죄대응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앙셀(Ancel)은 효과적인 사회방위를 위하여 형법과 형벌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③ 그라마티카(Gramatica)는 생물학적 ·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의 영향을 받아 예방적 · 교육적 치료처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 ④ 범죄는 형벌보다 사회개혁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사회방위론의 핵심인 사회적 위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문 9.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와 같이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이를 추구하는 수단을 경시하는 인식에 대한 설명과 부합하는 범죄원인론은?

- ① 사회유대이론
- ② 낙인이론
- ③ 일상활동이론
- ④ 아노미이론
- ⑤ 생활양식이론

문 10.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학자의 이름이 옳게 묶인 것은?

(A)은(는) 범죄자들 가운데 일부는 선천적 기질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며, 그들은 진화론적으로 퇴행한 것으로서 격세유전을 통해 야만적 속성이 유전된 돌연변이적 존재라고 하였다. 그러나 (B)은(는) 범죄는 신체적인 변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유전학적 열등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A)을(를) 비판하였다. 한편 (C)은(는) 체형을 비만형, 운동형, 쇠약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범죄율과 범죄유형을 조사한 바 있다.

ㄱ. 롬브로조(Lombroso)	ㄴ. 고링(Goring)
ㄷ. 곱다드(Goddard)	ㄹ. 후튼(Hooton)
ㅁ. 셸튼(Sheldon)	ㅂ. 크레취머(Kretschmer)

- A B C
- ① ㄱ - ㄴ - ㄹ
 - ② ㄱ - ㄴ - ㅂ
 - ③ ㄱ - ㄷ - ㅁ
 - ④ ㄱ - ㄹ - ㅂ
 - ⑤ ㄴ - ㄹ - ㅁ

문 11.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속성을 신체적 뇌기능, 생화학적 특성의 측면에서 찾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② 개인의 정신작용의 특이성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범죄의 심리학적 분석은 범죄자에 대한 개별처우이념과 부합한다.
- ④ 범죄를 범죄자의 과거 학습경험의 자연적 발전으로 파악하는 학습 및 행동이론도 여기에 속한다.
- ⑤ 인격적 특성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인성이론은 사람의 성격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한다.

문 12. 형사배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심제도는 당사자주의 하에서 발달한 것으로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 ② 일반적으로 배심제도에서는 참심제의 경우와 달리 사실문제를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③ 현행법상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심리에 참여하되 양형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④ 현행법상 배심원은 법률이 정한 대상사건에 한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 ⑤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6조는 형사피고인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 13. 사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사면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생명권도 헌법에 의한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하여 사형을 형벌로 정했다라도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5항은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⑤ 소년법에는 사형 대신 절대적 부정기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 14.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을 통해 사회의 규범의식을 강화시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론이다.
- ② 일반예방이론은 범죄자의 심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특별예방이론은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그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상대적 형벌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특별예방이론은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확장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통합설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통합을 주장하고 책임원칙을 부정한다.

문 15. 현행법상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②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 ③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필요적 몰수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직후 새로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문 16. 현행법상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는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 ② 절도를 하기로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으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그 금품을 몰수할 수 있다.
- ③ 검사의 몰수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몰수할 수 없다.
- ④ 추징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⑤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각자에 대하여 전체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문 17. 현행법상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된 기간 또는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
- ③ 소년법상의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6월
-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1년
- ⑤ 치료감호가 가중료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피치료감호자는 3년

문 18. 갑(17세)과 을(18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이 (A),(B)와 같이 판단할 경우에 갑과 을에 대한 현행법상의 형사처분이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A)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가.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한다.
나.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B)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ㄱ. 장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ㄴ. 장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ㄷ.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ㅁ. 단기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 A | B | | A | B |
|---|-------------|-------------|--|---|---|
| ① | 갑 - 나, ㄱ, ㄷ | 을 - 나, ㄱ, ㄷ | | | |
| ② | 갑 - 다, ㄱ, ㄷ | 을 - 가, ㄱ, ㄷ | | | |
| ③ | 갑 - 나, ㄱ, ㄷ | 을 - 가, ㄱ, ㄷ | | | |
| ④ | 갑 - 다, ㄴ, ㄷ | 을 - 나, ㄴ, ㄷ | | | |
| ⑤ | 갑 - 가, ㄴ, ㅁ | 을 - 가, ㄴ, ㅁ | | | |

문 19. 현행법상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기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10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소년부 판사는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의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 ④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지 못한다.
- ⑤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문 20. 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금고형과 노역장유치는 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된다.
- ② 구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금과 마찬가지로 미결구금의 일종으로서 기간도 동일하다.
- ③ 가석방은 성인범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이 있다.
- ④ 15년을 초과하는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의 집행을 개시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문 21. 다이버전(Diver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낙인효과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식이다.
- ②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처분도 여기에 해당한다.
- ③ 담당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형사사법의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 ④ 사실상 유죄추정에 근거한 처분을 내리게 되므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⑤ 형사사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사건을 다이버전으로 취급함으로써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강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문 22. 현행법상 소년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검사선의주의(檢事先議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가 소년 형사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 ③ 소년부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 ⑤ 검사가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조사·심리하여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 검사는 그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문 23. 현행법상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를 한다.
- ② 소년원을 이탈한 보호소년의 유류금품은 이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 ③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해야 한다.
- ④ 보호소년등을 수용하는 경우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16세 미만의 자와 16세 이상의 자를 분리수용한다.
- ⑤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의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직권으로 친권자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문 24. 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태적 결손가정뿐만 아니라 기능적 결손가정도 소년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
- ② 가정의 빈곤을 소년범죄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소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③ 렉클레스(Reckless)는 자아관념을 비행에 대한 절연체로 보았다.
- ④ 맛짜(Matza)와 사이크스(Sykes)는 소년들이 중화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준법과 위법간의 표류상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 ⑤ 글뤽 부부(Glueck & Glueck)는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체특징이 중배엽형일수록 범죄성향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 25.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개념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 ③ 긴급피난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도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범죄피해자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외국과 상호보증에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법

문 1.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 ②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강행규범은 국제법의 다른 법원(法源)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 ④ 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
- 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테헤란 인질사건(The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Case)에서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원칙이 강행규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문 2.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는 부작위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국가는 과실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③ UN헌장에 따른 적법한 정당방위(self-defence)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countermeasures)는 제3국에 대한 의무 위반을 초래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⑤ 국가는 국제책임을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

문 3. 다음의 국제적인 단체들 가운데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아닌 것은?

- ①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③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④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⑤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문 4.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에 대한 수용은 수용국가의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주권행사로 인정된다.
- ② 계약상의 권리는 재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일반적으로 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④ 수용조치를 취할 경우 수용국가는 보상을 해야 한다.
- ⑤ 최근 타결된 한미 FTA협정문(안)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문 5.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적 보호권은 사전에 조약에 의하여 혹은 사후에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 ② 외교적 보호권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 ③ 외교적 보호권은 한번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④ 칼보조항(Calvo clause)이 자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부인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 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인터한델(Interhandel) 사건에서 국내 구제수단의 완료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선행요건이라고 밝혔다.

문 6. 다음 판결의 요지에 부합하는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옳은 것은?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6.3.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 ① 효과이론(effects doctrine)
- ②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nationality principle)
- ③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 ④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 ⑤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문 7. UN의 주요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UN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등 총 5개 주요기관이 있다.
- ②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③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 장려'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임무이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여할 수 없다.
- ⑤ 신탁통치이사회는 현재 빈곤퇴치 등 세계적 현안을 다루는 주요기관으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문 8.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절차사항에 대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하는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결정한다.
- ② UN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하는데, 이 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투표하면 권고안은 부결된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행에 따르면, 상임이사국이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반대투표한 것으로 취급된다.
- ④ UN헌장의 규정상 절차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국들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하면 가결된다.
- ⑤ UN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문 9.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WTO 회원국인 A국은 WTO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B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A국은 WTO 회원국인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제품(like product)에 대해서는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① GATT 1994의 최혜국대우의무는 WTO협정 당사국간에만 적용되므로, A국은 B국에게 부여한 특혜를 C국에 부여할 의무가 없다.
- ② 관세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의무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A국은 B국에 부여한 특혜를 C국에 부여할 의무가 없다.
- ③ 10%와 12%의 차이는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미소(de minimis) 차이허용조항'에 의해 문제될 것이 없다.
- ④ A국이 B국에게 부여한 특혜는 C국에게도 부여되어야만 A국의 최혜국대우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A국의 조치는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B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최혜국대우의무 위반이 되므로 관세차별조치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10.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의 선택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택조항은 1920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규정 채택 당시 강제관할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타협의 산물로 이를 ICJ가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 ②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동 선언서는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 ③ 선택조항은 조건부로 수락할 수 있다.
- ④ 선택조항 수락선언에 붙이는 유보 중 수락선언국 자신이 국내문제라고 판단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는, 이른바 자동적 유보(automatic reservation)는 ICJ 자신이 ICJ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 ⑤ ICJ 제소시에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관할권일지라도 선택조항 수락선언의 철회에 의하여 관할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 ICJ판례의 입장이다.

문 11.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 ② 대륙변계의 외측한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대륙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 ③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④ 연안국이 자원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의 반경 12해리 이내에서는 제3국 선박들의 항행이 금지된다.
- ⑤ 국가는 타국의 대륙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해저전선 및 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문 12.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임시재판관(Judge *ad ho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판관 중에 자국민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을 선임해야 한다.
- ② 임시재판관은 보통 국적재판관(national judge)으로 불리므로 분쟁 당사국과 동일 국적을 가져야 한다.
- ③ 임시재판관 제도는 환경문제 전담 재판부(Chamber for Environmental Matters)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 개의 분쟁 당사국은 1인의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임시재판관은 당사국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문 1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자조약에서 유보의 반대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② 다자조약의 당사국인 A국이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B국만이 수락한 경우에, 당해 조약의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는 유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유보는 유보국과 유보수락국 사이에서 관련 조약규정을 당해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 ④ 유보는 타방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
- ⑤ 유보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해야 한다.

문 14. 국가영역의 취득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무효이다.
- ②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terra nullius*)이며, 이러한 무주지는 무인지(無人地)이어야 한다.
- ③ 시효(時效)는 선점의 경우와 비교하여 실효적 지배가 더 오랜 기간 요구된다.
- ④ 할양(割讓)이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영토 일부의 이전을 말한다.
- ⑤ 자연적 현상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국가영역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에까지 자동적으로 영토주권이 미친다.

문 15.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과 그 부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 별도의 협정이 존재하고 있어 단일 분쟁 사안에 이들 협정들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
- ②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중 GATT 1994와 원산지에 관한 협정의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GATT 1994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③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은 WTO 회원국이라도 이들 협정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양허표는 GATT 1994에 부속되어 있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는 부속되어 있지 않다.
- ⑤ 각료회의는 WTO회원국 만장일치로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문 16. B국에 주재하는 A국의 외교관 甲이 사적인 여행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B국 국민 乙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B국 경찰관은 현장검증 등에 있어서 甲에게 임의로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는 없다.
- ② A국은 甲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 ③ B국은 甲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B국은 乙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甲이 응소하지 않는 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 17. UN해양법협약상 섬(islan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섬은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다.
- ② 섬은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다.
- ③ 인공섬은 섬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영해를 갖지 아니한다.
- ④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 ⑤ 본토로부터 200해리 밖에 있는 섬은 그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문 18.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PCA는 1901년에 설치되어 활동하다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만들어진 후에 해산되었다.
- ② PCA는 15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이다.
- ③ PCA 중재재판관은 ICJ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선출된다.
- ④ ‘팔마스(Palmas)섬 사건’은 PCA 중재판정으로 해결되었다.
- ⑤ 현재 PCA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중재재판관이 없다.

문 19. WTO 회원국인 A국과 B국은 WTO 대상협정상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A국과 B국의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그러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경우 WTO 규범상 양국의 합의가 유효하다.
- ② A국과 B국이 모두 UN회원국이라면 그러한 합의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위반이 아니므로 ICJ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 ③ WTO 대상협정상의 분쟁은 WTO DSU 규정상 WTO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ICJ에 회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A국과 B국은 동 분쟁을 ICJ에 회부할 수 있지만, 총의(consensus)에 의한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⑤ A국과 B국은 WTO DSU 제25조의 중재조항에 따라 ICJ에 동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문 20.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당사국 및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제3국은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 ②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 ③ 일방 분쟁당사국이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상소기구가 보고서를 배포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④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지한 제3국은 상소기구에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상소기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 ⑤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문 21. 국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승인의 효과는 정부변경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 ② 사실상의 승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철회할 수 있다.
- ③ 조건부 승인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승인은 무효이다.
-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곧 남·북한 상호간에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⑤ 통상대표부의 설치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문 2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제24조에 규정된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의 차이점은 체약국들이 공동역외관세를 도입하느냐 여부에 있다.
- ②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지 않는 WTO 회원국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높이는 방법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③ FTA 체약국간의 무역에 대하여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④ WTO 회원국은 FTA를 체결하면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FTA 체약국 상호간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문 2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정변경의 대상은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였어야 한다.
- ② 조약 당사국이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어야 한다.
- ③ 사정변경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사정변경이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당사국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경우이어야 한다.
- ⑤ 국경선획정조약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4. WTO설립협정 부속서 1A에 첨부된 다자간상품무역협정에 속하는 것은?

- ①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②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 ③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④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⑤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문 25.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상 ICC의 관할대상범죄이지만, 현재 관할권 행사가 유예된 것은?

- ①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 ②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 ③ 전쟁범죄(war crimes)
- ④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 ⑤ 마약거래(drug trafficking)

노동법

문 1. 헌법이 명시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는?

- ① 외국인근로자
- ② 법률이 정하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③ 사립학교 교원
- ④ 법률이 정하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문 2. 노동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적자치의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 ②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 ③ 소유권 존중의 원칙과 계약자유 원칙은 일정한 제약을 받지만 과실책임의 원칙은 수정되지 않는다.
- ④ 집단적 자치의 원리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의 기본원리가 될 수 없다.
- 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하여 국가경제의 경쟁능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공공이익 존중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문 3.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④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지 않는다.
- ⑤ 교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문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도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③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연령만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우선선정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⑤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와는 별도로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문 5.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 ① 휴게 - 주휴일
- ② 주휴일 - 생리휴가
- ③ 연차 유급휴가 - 생리휴가
- ④ 연차 유급휴가 - 유산·사산보호휴가(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 ⑤ 육아휴직 - 유산·사산보호휴가(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문 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 ①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이다.
- ②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이다.
- ③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④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 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문 7.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워진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면 (A)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B)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A | B |
|----------------|-----|
| 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 3개월 |
| ② 노동조합은 | 1개월 |
| ③ 근로자는 | 6개월 |
| ④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 6개월 |
| ⑤ 근로자는 | 3개월 |

문 8.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세 이상의 남성 근로자의 경우)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1주간에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③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주문량의 증가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⑤ 운수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문 9.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 ①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 ②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③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④ 제36조(금품청산)
- ⑤ 제55조(휴일)

문 10. 시용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근로자와의 채용계약에서 시용기간의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 A. 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 B. 이 근로자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시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의 법적 성질은

- A.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이다.
- B. 근로계약이다.

다.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하는 기준은

- A.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 B.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기준보다 완화시킬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① 가 - A, 나 - A, 다 - A
- ② 가 - B, 나 - A, 다 - A
- ③ 가 - B, 나 - A, 다 - B
- ④ 가 - A, 나 - B, 다 - A
- ⑤ 가 - B, 나 - B, 다 - B

문 11.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사용자가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나. 사용자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빌려 준 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다.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마.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지급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① 가(×), 나(×), 다(○), 라(○), 마(○)
- ② 가(○), 나(○), 다(×), 라(○), 마(○)
- ③ 가(×), 나(×), 다(×), 라(○), 마(○)
- ④ 가(○), 나(×), 다(○), 라(×), 마(○)
- ⑤ 가(×), 나(×), 다(○), 라(×), 마(×)

문 12.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③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④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⑤ 노동조합의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할 수 있다.

문 13.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또는 미성년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만으로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 ③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 ④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가 취직인허증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 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4.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뚜렷한 무효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 ②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같은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③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다.
- 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문 15.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인 것은?

- ①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
- ② 노동조합의 파산
- ③ 소속 연합단체에 의한 제명
- ④ 노동조합 대표자의 해산결정
- ⑤ 사용자의 사업양도

문 16.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행위
- ②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③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를 이례적으로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
- ⑤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

문 17. 노동조합의 기관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고,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전임자이어야 한다.
-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문 18.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법령상의 절차를 거쳐 개시하여야 한다.
- ③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는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 ④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⑤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결정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찬성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
-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
- 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가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노동위원회를 통한 중재절차와 다른 중재(사적 중재)의 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 20.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② 사용자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사용자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노동조합이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소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교섭권한이 없다.

문 21. 다음 각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기관과 옳게 짝지은 것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임)

- ①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 노동위원회
- ② 노동조합의 해산 -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 ③ 단체협약 - 노동위원회
- ④ 직장폐쇄 -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 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 행정관청

문 2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아닌 것은?

-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판정에 관한 업무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재심에 관한 업무
- 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시정에 관한 업무
-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관한 업무

문 23.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공부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⑤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경제법

문 24.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 ③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노사협의회장의 의결사항이다.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 ② 회사의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③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 ④ 근로시간 종료 후 노동조합이 개최한 체육대회경기 중 사고로 인한 부상
- ⑤ 회사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가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신체 장해

문 1.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원고는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 ⑤ 소비자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문 2.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물품등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행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급자만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제된다.
- ②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거절은 경쟁제한의 우려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규제된다.
- ⑤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입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탈법행위의 금지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기업결합의 제한
- ②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③ 상호출자의 금지
- ④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사업자의 경제활동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연인과 법인,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등과 같은 주체의 법적 형태는 묻지 않는다.
- 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칙적으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원칙적으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결합의 제한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비교한 것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양자 모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기업결합의 제한에는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ㄷ. 양자 모두 신고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ㄹ.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등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업결합의 제한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 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 ③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④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
- ⑤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문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요구
- ②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것과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자료나 물건의 조사
- ④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 ⑤ 부당지원행위의 혐의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 요구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입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② 불이익제공에서의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 ③ 이익제공 강요의 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 ④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판매목표의 강제성이 인정된다.
- ⑤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

문 11.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 ② 부당지원행위의 객체인 '다른 회사'는 반드시 대규모기업 집단의 계열회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된다.
- ④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용역의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부작위행위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⑤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수평형 기업결합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다.
 ㄷ. 희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
 ② 거래상대방의 제한
 ③ 임원 지위의 겸임
 ④ 상품의 출고 제한
 ⑤ 입찰에 있어 낙찰자의 결정

문 14.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상담기구는 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1인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후 분쟁조정 내용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그 수락 여부를 30일 이내에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문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② 개별약정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될 경우에는 개별약정으로 인하여 적용이 배제되었던 약관조항이 적용된다.
 ③ 개별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그 내용이 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하더라도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구두에 의한 개별약정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여 개별약정과 다른 약관조항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차별적 취급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② 경쟁사업자 배제 - 기술의 부당이용
 ③ 거래강제 - 끼워팔기
 ④ 구속조건부거래 - 배타조건부거래
 ⑤ 사업활동 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문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 및 그 표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비자단체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표지를 정함에 있어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일부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의 내용은 모두 무효로 한다.

문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약관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거래주체나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된다.
 ②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법은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 19. 甲은 대금을 10개월 균등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乙과 에어컨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에어컨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甲은 5개월 간은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3개월째 계속하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도인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에어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에어컨의 소유권이 乙에게 유보된 경우에도 乙은 할부계약을 해제하여야만 甲에게 에어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이미 연체된 할부금에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할부계약을 해제하고 에어컨의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乙은 甲에게 통상의 사용료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처벌조항이 없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처벌조항이 있다.
- 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경합하는 경우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 ④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과징금규정이 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과징금규정이 없다.

문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에서 매수인의 철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에서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④ 청약의 철회를 위해 서면을 발송한 경우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⑤ 계약서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문 2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후원수당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다단계판매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 ④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의 합계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 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문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들 모두는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
- ②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전화권유판매자는 판매계약 체결 시 소비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계약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로 송부함으로써 계약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 ④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전화권유판매자는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 없이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ㄴ.“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감사와 지배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ㄷ.“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회사로서, 국내회사인지 국외회사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ㅁ.“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적용대상은 그 성질상 상품거래에 한정되며 용역거래는 제외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문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에 앞서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③ 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④ 사업자가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도 범위만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